

한국교육행정학회소식지

THE NEWSLETTER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제105호
2010. 10. 31

-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ssea.or.kr) ■ 발행인 송광웅 ■ 편집인 정수현, 신철균
- 주소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우면로 161 서울고대 인문관 414호
- TEL 02-3475-2522 ■ E-mail kssea1@hanmail.net

교육행정학연구 별책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 (www.kssea.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업적주의 타도’ : 제3의 길은?

박남기(본회 국제학술위원장,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I. 들어가는 말

2010년 10월 초 한국교총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를 위해 교육 부문에서 가장 중점을 뒀어야 할 부분으로 교원은 ‘실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기제 마련(학벌타파)’을 들었다. 이는 교사들의 인식일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인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학벌타파를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다양한 제도개혁을 시도해왔다.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학벌주의란 특정 대학 출신이 사회의 주요 요직을 독식하는 현상을 말한다(과거에는 고등학교가 중요한 인맥으로 비판을 받아왔으나 평준화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는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를 문제시 하는 이유는 능력이 아닌 학력(學歷)이 사회 지위배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학벌과 개인의 능력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고 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학력의 상대어(반대어)가 능력임을 가정하고 있다.

학벌타파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몇몇의 명문대졸업생이 법조계를 장악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외교부를 비롯한 부서들에서의 다양한 특별채용제도 도입, 사기업체 신입사원 채용을 지필고사에서 다양한 심층면접 등으로의 전환 등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의 한 줄 세우기가 학벌사회를 조장한다고 생각하여 여러 줄 세우기를 정책목표로 삼고 입학전형요소 다양화, 입학사정관제 도입, 수능 등급제 도입 등등의 대학 입시제도 개혁도 시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심지어 학벌타파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일부 정책은 대학 진학이나 직업 결정에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배경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능력이 더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본래 취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마저 있다. 그 결과 사회 특정집단의 인기대학과 학과 점유율은 높아가고, 특정집단의 고위공직자나, 의사, 법조계 점유율 또한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진단을 한 후 처방을 하고 그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간다면 그 이유는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는 경우일 것이다. 만일 증세를 완화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잘못하여 병을 키워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단을 다시 하여 과거 진단의 오류를 밝혀내고,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해야 할 것이다.

II. 업적주의 타도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가 내린 진단과 처방의 오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학벌사회라는 개념을 콜린스(Collins)의 학력주의사회 개념에 근거하여 새롭게 분석해보겠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력과 직업에서의 계층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유를 마이클 영(Young)의 업적주의사회 그림자라는 개념에 의거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1. 한국은 학력주의(學歷主義)사회인가?¹⁾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학력주의사회(credential society)라는 말은 콜린스(Collins, 1979)가 주장한 지위집단경쟁론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그가 제시한 학력주의(學歷主義) 사회라는 개념은 우리의 과도한 교육 경쟁 현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지위집단경쟁론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교육 재화 접근 기회에 부모의 배경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 학교가 계급을 재생산하는 정도, 그리고 사회의 지위배분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함에도 그가 제시한 개념을 우리사회 진단의 도구로 삼고, 그에 따라 처방함에 따라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박남기(2003)의 주장을 토대로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진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다. 가령 부모가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자녀를 등록금이 아주 비싼 명문 사립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거쳐 명문 사립대학으로 진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명문대학에서 잘 받아주기 때문에 부모들은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면서도 자녀를 명문 사립학교

에 보낸다. 다음으로 미국의 부유한 사람들은 소규모의 교육구(총 학생수 500인 이하)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명문 공립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다른 계층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그 교육구 내의 학교는 인근의 다른 가난한 교육구 내의 학교에 비해 교사의 급여나 시설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 우수한 고등학교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미국은 언론사에서 전국 단위로 고등학교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다. 그러한 고등학교를 나오면 명문 대학 진학이 용이해진다. 이 이외에도 미국의 경우 기부금 입학제도 등 다양한 통로가 있어서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국처럼 부모의 배경에만 의존하여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 대학 졸업증과 실력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되어 학력주의 사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일부 소외된 계층이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아니면 공식적으로는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교를 통한 부모 계급 재생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미국과 같은 학력주의 사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모의 배경이 명문대학 졸업증 취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초점을 둔 콜린스 주장의 핵심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부모가 사교육을 통해 자녀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식,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 선발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부모의 배경이 좋아도 자녀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학력을 가질 수 없어서 졸업증(학력)과 졸업생 실력 간의 일치 비율이 아주 높았다. 그런데 학벌타파를 한다면서 역으로 부모의 배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면접제도 활성화,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통해 오히려 미국식 학력주의사회로 이행해가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의 지위 배분 방식에서도 우리는 미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좋은 대학, 좋은 학과 선택에 부모의 배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중요 지위를 배분할 때에도 학력을 기초로 한 인맥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몇 해 전 미국의 경우는 인맥(human network)을 통한 취직이 70% 정도에 달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30%정도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정부의 중요 자리도 관련 명문대학의 관련 대학원 재학중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연을 맺고 실력을 인정받아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은 추천서가 학력주의사회, 인맥주의 사회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학력(學歷)을 기준으로 지위를 배분하는 사회가 아니라 객관적 시험을 통해 지위를 배분하는 능력주의 사회 요소가 미국에 비해 상당히 더 높았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대학 출신이 사시, 행시, 외시 등의 합격생에서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들이 학벌을 형성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객관적인 시험 결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력과 개인 업적(능력+업적) 간의 일치도가 아주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무

원 및 일반 회사 신입사원 선발시 능력이 아니라 학력으로 선발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선발제도를 바꾼 또 하나의 이유는 필기시험 방식의 타당성 문제이다. 이러한 비판들을 토대로 고급공무원 선발뿐만 아니라 기업인재 선발방식마저 미국식으로 바꾸어감으로써 역시 미국식 학력주의 사회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학력주의 사회 강화, 부모의 배경이 미치는 영향력 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체에서 시험이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방대 출신자의 합격이 더 어려워져 지방 국립대마저 몰락해가고 있는 현실은 이를 반증해준다. 시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범조인이나 공직자를 뽑으면 언뜻 학력이 미치는 영향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부모의 배경이 미치는 영향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콜린스가 주장한 학력주의 사회라는 개념을 잘못 적용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 처방을 하다 보니 의도와 달리 정반대로 학력주의가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만일 우리 사회가 학교의 계급재생산 기능이 강화되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좋은 직업에서 특정 대학 출신자의 비율을 줄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능력주의사회, 공정한 사회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다.

2. 업적주의 사회의 그림자²⁾

최근 복지사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업적주의 사회가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2001년 6월 29일, 85세의 나이로 병에 시달려 죽음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마이클 영은 ‘업적주의 타도’라는 짙막한 칼럼을 통해 자신이 40여 년 전에 세상에 내 놓았던 업적주의 주장에 관한 그의 마지막 입장을 정리했다. 마이클 영이 말하는 업적이란 능력+노력의 결과이다. 그는 자신의 책 「업적주의 사회 도래(The Rise of the Meritocracy)」가 ‘1958년부터 업적주의에 반대하는 최종 반란기로 생각되는 2033년 사이에 영국에서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를 경고하기 위한 풍자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업적주의’라는 말을 사회적·정치적 이상으로 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이 대부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마이클 영은 업적주의 사회가 지속되면 될수록 업적주의사회의 그림자가 짙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업적주의의 그림자는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상층으로 몰림에 따라 하층민을 대변할 지도자 부재 및 이에 따른 하층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자포자기 증가, 세습이 아니라 업적으로 지위와 부를 획득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 상층부의 과욕에 대한 사회적 제재 수단 결여, 이에 따른 계층간의 양극화 심화, 업적 판단 기준인 교육을 향한 경쟁의 극단적인 모습을 하게 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이클 영의 관점에서 지금의 우리 사회를 돌아켜보자. 업적주의사회와 달리 귀족주의사회는 재산과

직업뿐만 아니라 교육권까지도 세습되는 사회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업적주의라는 이름하에 교육이 다시 세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 계층에 따라 교육이 세습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업적'의 의미를 규정할 권한과 통제력을 가진 상층부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게 업적의 의미를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세습이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전형에 따른 대학 한줄 세우기 극복, 잠재력 등 능력에 따른 선발, 다양한 입시제도 운영이라는 목적 하에 수시입학제 확대, 입학전형요소 다양화,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실시하면서 부모의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세습사회에서와 달리 '업적주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상층으로 집약되는 양상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Young(1958)에 따르면 세습사회에서는 타고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계급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고르게 배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속한 계급과 관계없이 가진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능력과 노력을 통해 업적을 갖게 된 사람은 업적주의 사회에서 점차 상층부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상층부에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집약적으로 모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과거와 달리 개천에서 용이 별로 나지 않는 이유는 개천물이 말라 용의 새끼가 제대로 크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업적주의 사회가 지속되면서 개천에 새끼를 낳는 용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다(박남기, 2004). 업적주의 사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능력을 가진 사람이 상층에 집약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업적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업적주의가 드리우는 그림자를 없앨 수는 없다. 물론 해를 가려 만물의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결국 만물을 죽게 할 것이므로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안은 업적주의의 그림자를 열게 하는 것이다. 마이클 영의 주장에 따르면 업적주의사회 그림자가 짙어진 것이 문제인데,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여 보다 정확히 개인의 업적을 평가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업적주의사회의 그림자는 짙어지게 될 것이다.

III. 업적주의 타도: 교육을 통한 인간 해방과 소외계층 배려

업적주의 타도에서 마이클 영은 토니 블레어 수상이 자신이 언급한 업적주의 강화가 가져올 위험을 알아채지 못한 채 업적주의란 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책을 읽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 하며 업적주의의 그림자를 열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만일 블레어총리가 공식석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에서 업적주의라는 말을 삭제한다면, 혹은 최소한 업적주의가 하향추세임을 밝힌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총리와 브라운장관이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올리고 신입적주의와의

거리를 유지한다면, 그리고 동시에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방정부 부를 소생시키고 지역민에게 국가정치에의 참여에 필요한 훈련을 시킨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이클 영은 「업적주의 타도」에서 업적주의 사회가 가져오는 그림자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업적주의라는 이름하에 귀속주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의 우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업적주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게 될 것이다. 업적주의 그림자를 열게 하기 위해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 산업적주의와의 거리 유지, 지역민에게 정치 참여에 필요한 훈련을 시킨 후 지방정부를 소생시키는 것 등이다.

업적주의사회의 그림자를 열게 하기 위해 교육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마이클 영은 업적주의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의 하나로 하층을 대변할 사람이 없어진 것을 들고 있다. 업적주의사회에서는 하층 사람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상층으로 이동함에 따라 더 이상 하층사람들을 대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가 지적한 것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이러한 그림자를 열게 할 수 있는 길도 교육 안에 있는 것 같다.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업적을 인정받아 설령 상층으로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하층을 대변하게 하고, 하층사람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대 성인의 한 분인 부처님은 태자로 태어나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였지만 백성들의 고생과 세상의 부조리와 비합리성을 보고 내적 갈등을 일으키며 구제할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영의 관점에서 보면 세습시기의 지도자는 약간의 죄의식이 있었고, 그 미안함이 오히려 중생구제의 생각을 갖게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속한 계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 계급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구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실제로 구제하는 사람이 많다. 계층과 무관하게 인간의 능력을 무작위로 고르게 배포하는 신의 의지(혹은 자연의 법칙)의 결과로 계층간 유동성이 발현될 여지가 생긴다면, 교육을 통해 타인과 공감할 수 있고 자기가 속한 계층과 한계를 벗어나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간 해방 가능성의 결과로 인간 사회가 이어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망각해가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 가능성 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인간이 경쟁의 함정에서 벗어나 경쟁의 필요성과 효과는 인식하고 유지하되 사회적 책무성을 느끼는 사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글로벌시민이 되도록 교육력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유능한 사람을 정확하게 선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되, 혹시라도 그러한 노력이 역으로 계층세습에 기여하지 않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업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업적주의사회가 지속될수록 그 그림자가 짙어짐을 깨닫고, 그 그림자를 열게 하는 데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대학 진학에서의 특별한 배려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들이 직장을 구할 때에도 특별한 배려를 하는 방식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공정사회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즉, 입학사정관제도, 특별채용제도 등은 소외된 집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하고자 할 때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최근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정사회’ 추구도 업적주의사회의 그림자를 없게 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박남기(2008). 유·초등교육의 발전 과제: 교육전쟁을 넘어 교육평화로. 한국교육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방향(47-76). 한국교육학회.
- 박남기(2004).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오는 이유. 한국대학신문, 497호, 7면.
- 박남기. (2003). 교육전쟁론. 서울: 장미출판사.
- Young, M.(June 29, 2001). Down with meritocracy: The man who coined the word four decades ago wishes Tony Blair would stop using it. The Guardian (London), p. 17.
- Young, M.(1994). The rise of the meritocracy.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각 주

- 1) 이 부분의 내용은 박남기(2003)의 ‘교육전쟁론’을 기초로 작성된 것임.
- 2) 이 내용과 그 이하 대안 부분은 박남기(2008)의 「유·초등교육의 발전 과제: 교육전쟁을 넘어 교육평화로」를 토대로 발전시킨 것임.
- 3) “문제는 유능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더 열등한 자녀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는 평균점을 향한 지속적인 회귀현상 때문이다. 지능이 낮은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자신보다 약간 더 뛰어난 자녀를 갖게 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배적 엘리트계층이 한 번 확립되면 바로 유전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인 성향이 사회적 유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Young, 1994: 171)



| 시론 |

학술지 발간, 새로운 도약을 생각할 때다

김혜숙 (본회 학술위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지난 10여년의 우리나라 학계를 돌아볼 때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각종 평가와 연계하여 연구업적에 대한 기준과 독려가 지나치리만큼 빠른 속도로 강화된 점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자들은 더 많은 논문을 쓰도록 촉구 받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병행하여 학술지 발간의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등재 학술지 제도가 확립되어감에 따라 등재학술지로의 격상을 위해 각 학회와 연구소들은 때로 전략적 노력을 기울였고 등재 후보 또는 등재 학술지의 수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문 발전이 수준 높은 연구 활동과 논문 작성에서 출발하고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학술지의 양적·질적 확대는 바람직한 현상이거니와 우리 교육행정학계를 비롯한 학계의 발전 속도는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학술지, 특히 SCI, SSCI 등 최고 수준의 선진 학술지를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이는 국제적 영향력의 차원에서 그토록 강조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학술지의 논문 심사와 게재 절차에 대해 학계가 아직은 그다지 인정하고 있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학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혁신이 필요하겠으나 학술지 발간 체계를 선진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지 발간에 있어 또 한번의 upgrade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발전과 한계점을 간략히 검토한 다음 SSCI 급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방법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미국 교육행정학계의 대표 학술지 중 하나인 EAQ(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의 간행체제를 살펴본다. 또 향후 학술지 발간의 upgrade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교육행정학 분야 학술지의 발전과 한계점

다른 분야도 비슷하겠지만 교육행정학 분야의 경우 교육행정학회의 「교육행정학 연구」외에도 연구자 군이 비슷한 다양한 학술지가 여러 곳에서 등재 또는 등재 후보 학술지로 발간되고 있다. 대학, 연구소 등에서 발간하는 종합 학술지에도 우리 분야 논문이 많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심사자로 논문 심사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가운데 몇 가지 발전적 변화를 실감하였을 것이다.

우선 심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논문 투고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소신껏 판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온정주의가 만연했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심사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학계의 인재풀이 넓어지는 가운데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범이 점차 자리 잡아 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가 매년 교체되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심사자들이 여전히 익명성 문제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올법한 비공식적 언급이지만 누구는 거의 “계재가”를 놓느니, 누구는 거의 “계재불가”를 놓느니 하는 심사자 평판(?)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하면 나의 판정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감에서 “계재불가” 판정을 망설이기도 한다.

둘째, 심사기준이 과거에 비해 명확해졌고 그에 따라 심사자의 검토의견도 보다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현재「교육행정학 연구」는 6개 항목 (연구주제 및 문제의 명료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논리전개의 적절성, 논문의 질적 수월성 및 독창성, 한국교육행정학 발전에의 기여도)에 대해 우수, 양호, 미흡의 3단계 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3인 이상 심사자의 판정을 종합하고 의견이 엇갈릴 경우 최종 판정을 위한 기준을 학술지마다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학술지에 비해서는 심사기준의 명확성이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6개 항목 각각에 대해 판정한 결과와 게재여부의 최종 판정 결과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또 우수, 양호, 미흡의 3단계 판정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의견을 가지는 심사자도 적지 않다.

셋째, 심사자, 투고자 모두 논문심사에 대한 이해가 신장되었다. 연구의 필요성, 적절한 연구방법의 사용,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학술지 논문으로서 요구되는 기준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심사과정에서 그에 대한 점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하게 된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검토의견을 대충 쓰는 심사자들이 줄어들고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논문 내용을 발전시키는 투고자도 많아지고 있다. 수준급의 논문 한편 한편이 지식 기반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교육행정학 분야 연구 주제의 방향성이나 방법론에 대해 투고자, 심사자의 잠재의식이 여전히 상이한 가운데 특히 심사자가 특정 연구 방법론에 편중하여 다른 방법론에 대해 인색한 판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다. 심지어 심사자의 견해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연구에 대해 연구자체의 문제점과는 관계없이 불합리한 판정을 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미국 EAQ 의 발간 체제 및 시사점

그렇다면 이른바, SSI급 학술지들은 어떤 방식으로 심사와 발간을 하며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몇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미국 EAQ의 발간체제 및 논문심사 양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1) EAQ 발간 및 운영 체제

EAQ는 미국 교육행정학회(University Council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가 발간하는 학술지로서 주관대학(host university)에 편집팀(editorial team)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발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1) EAQ 발간 체제

EAQ는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와 편집팀(editorial team)의 쌍두마차 체제하에 발간된다. 물론 학회인 UCEA의 운영위원회가 큰 범주의 의사결정을 하고 SAGE라는 출판사가 출판을 담당하지만 학술지 발간의 전문적 일은 이 두 곳이 주체이다. 전국적으로 40-50명에 달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운영의 방향 설정을 하면서 편집위원들이 논문 심사자로서 적극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편집인(editor)의 재직 대학 학과에 구성되는 편집팀은 같은 학과 교수들인 10명 이내의 부편집인(associate editors) 및 사무 간사(managing editor)로 구성되는데 그야말로 주관대학이 되어 학술지 발간의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특이한 점은 학회인 UCEA의 집행부가 매년 바뀌는 것과 달리 편집위원회 및 편집팀은 최소한 3년 단위로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주관대학이 되고자 하는 교육행정학과는 학회에 응모 절차를 밟는데 편집인의 명망도 등 여러 기준에 의해 평가받아 주관대학 및 편집인 지위를 따내는 과정을 거친다. 3년 후 재평가하여 1회 정도 연장을 하고 있어 대부분 6년은 같은 편집팀이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한국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데 6년간 편집팀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되지만 EAQ 주관대학 되는 것이 대학 및 학과의 평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한 편이다. 편집인의 경우 전직 학회장 등 명망도가 높아야 하고 편집인, 부편집인 경력도 학술적 전문성을 인정하는 풍토이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가 가능한 것 같다. 재원은 UCEA와 주관대학이 공동으로 지원한다.

(2) 주관대학의 편집팀 운영 방식¹⁾

편집팀은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매 2주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통상 2-3시간에 걸친 장시간 논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 하는 일은 먼저 2주 동안 투고된 논문에 대해 각 5명씩의 심사자를 결정하는 일이다. 편집팀 교수들은 투고 논문별로 간사가 임시로 정리해 온 분야/방법론 목록을 보면서 빔프로젝터 화면으로 함께 논문요약 부분을 읽는다. 불분명한 경우 연구문제나 연구방법론 부분을 참고하기도 하면서 세부 분야와 방법론을 재빨리 판정한 다음 심사자를 정한다. 동시에 부편집인 중 1인을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

인으로 정해 이후 심사결과를 종합 검토하도록 한다.

심사자 결정을 위해서는 교육행정학 분야 연구주제별 심사자 풀이 적혀 있는 파일이 요긴한 자료로 활용된다. 10여개 이상의 세부 분야별로 연구자가 정리되어 있고 해당 연구자별로 양적 방법, 질적 방법, 개념적 방법 각각에 대해 어느 것이 가능한지, 2개 이상이 가능한 경우인지 까지가 망라되어 있다. 편집인, 부편집인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원풀 목록을 활용하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²⁾ EAQ가 양적 연구방법을 선호해온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방법, 질적 방법, 개념적 방법 3개로 구분하는 점 또한 주목하게 된다.

편집팀 회의에서는 제출양식에 맞지 않거나 질적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되는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회부를 하지 않기도 한다. 이 경우를 포함 모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letter 발송을 일상화 하고 있다. 심사기간은 약 3주를 주고 5인 중 3인 이상의 심사결과가 기한 내에 들어오면 다음 편집팀 회의에서 결과 판정을 내리게 된다. 편집팀 회의의 두 번째 과제는 3인 이상의 심사결과가 들어온 논문들에 대해 결과를 판정하는 일이다. 투고 논문 각각에 대해 해당 책임을 맡은 부편집인이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고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집단적으로 내리게 된다.

(3) 질 제고를 위한 노력

학술지로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우선 꼽을 수 있는 점은 심사결과 5개 중 3개 이상이 통과면 게재 식의 기계적 판정을 하지 않는 체제를 갖춘 점이다. 곳곳에서 질적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즉, 3-5개의 심사 결과가 들어오면 해당 부편집인은 심사결과와 구체 내용을 검토한 다음 최종 보고서를 서면 작성하여 편집팀 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 때 게재 여부에 대한 개별 심사자의 의견 수가 물론 중요하지만 심사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결과는 같은 비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팽팽히 의견이 갈린 경우 등 편집팀 회의에서 심도 있는 재논의를 거쳐 질적 판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 심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한편 EAQ는 심사자에게 지급하는 심사료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얼핏 내실 있는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해 보인다. 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심사자가 되는 것은 학계의 인정과 공헌이라는 인식이 일반화한 풍토를 기반으로 심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심사 참여 호응도, 심사기한 엄수도, 심사의 질 3가지를 기준으로 매년 '올해의 심사자(Reviewer of the Year)' 를 3-5명 선정하여 연차 학술대회 때 시상한다.³⁾

1) 필자의 미국 연구년 당시 University of Utah가 1980년대에 이어 두 번째로 EAQ 주관 대학이어서(2003-2009년) 객원교수 자격으로 편집팀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2010년부터는 Texas A&M University가 주관대학을 맡고 있으며 2010년 현재 EAQ Volume은 46이다.

2) 인적자원풀의 목록 작성은 주기적으로 연구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최신 연구 저자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올해의 심사자' 상은 연간 3편 이상 심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2006-2007년의 경우 3편 이상 심사자는 15명, 4편 이상 심사자는 13명에 달하였다.

2) 논문심사 양식

EAQ의 논문심사 양식은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교한 편이다.

(1) 게재 여부: 5가지 중 하나로 판정한다.⁴⁾ 특기할만한 것은 “거부”의 경우 그냥 거부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문제로 거부된 것인지 EAQ라는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거부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점이다. 이는 학술지들이 전문화 하면서 개별 학술지의 성격에 맞는가를 중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___ 통과 (Publish, 필요시 편집상 수정만)
- ___ 수정조건 통과 (Accept, 구체적 수정조건을 따를 것을 전제로 통과)
- ___ 수정 (Revise, 검토의견에 따라 수정하고 재 제출 권고)
- ___ 거부 (Reject, 구체적 사유 명시)
- ___ 거부 (Reject, EAQ에 부적합하여 거절, 타 학술지명 제안)

(2) 항목별 점수: ①문장의 명확성, ②중요성(교육 지도자/교육정책 결정자/교육 연구자에 대한), ③강력한 개념틀 및 이론적 배경, ④연구방법론의 엄격성, ⑤연구결과 제시의 명확성, ⑥논의/시사점/제언, ⑦해당분야 지식 발전에의 기여, ⑧EAQ 게재 논문으로서의 적절성, ⑨주제가 EAQ 독자에게 어필하는 정도 각각에 대해 5단계로 점수를 부여한다. 심사 기준 중 중요성(significance)의 경우 지도자, 정책 결정자, 연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각각 판정하도록 하고 있어 11개 기준인 셈이다.

(3) 허심탄회한 의견

심사자들의 검토결과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집위원회는 어떤 의미에서 ‘허심탄회한 의견(confidential comments to editorial staff)’란을 가장 주목하여 본다. 항목별 점수 부여에서 부분의 합이 전체를 포괄하는 데 적절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사자들은 이 란에서 실질적인 의사 표시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요약이 주어진 형식에 맞지 않고 저자 추정이 가능하도록 노출시켰다” “글 쓰는 방식 때문에 검토자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한다(이후 1.5쪽에 걸쳐 설명)” 등이 그것이다.

(4) 투고자를 위한 의견⁵⁾

이 란에 적은 내용만 투고자에게 보내진다는 신뢰 하에 심사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구체적 의견을 기

4) 현재 「교육행정학 연구」는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3단계 판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5) 현재 「교육행정학 연구」는 심사위원이 박스 한쪽에 “수정 요구사항 또는 게재불가 사유”를 작성하면 논문투고자가 오른쪽에 이행사항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양쪽 모두가 공간적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술한다.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내용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와 비슷하다. 통과, 거부의 경우에도 “통과/거부”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짧게는 1쪽, 보통은 2-4쪽에 걸쳐(더블 스페이스 기준) 구체적으로 작성된다.

3.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언

EAQ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향후 교육행정학 분야 학술지 발간이 과정과 절차에서 도약하고 이를 통해 학문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해당분야 심사자 자원풀(resource pool)을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AQ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편집위원의 머릿속에 있는 심사자 자원뿐만 아니라 학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의 출발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편집위원회들이 어떤 형태로든 심사자 풀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점차 발전시켜가는 노력을 시작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평가기준을 보다 타당하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심사양식을 더 정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 기준을 단순히 6개에서 11개로 증가시키거나 3단계에서 5단계 판정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방식이 타당한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다시 이루어질 때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 심사과정의 여러 측면에서 질적 조정 혹은 질적 수준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심사 결과들에 대한 질적 검증을 한 단계 추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회에 대한 심사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친절하고도 세심한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EAQ의 경우 “투고자를 위한 의견”란을 제외하고는 편집팀(editorial staff only)만 읽는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실제로도 해당 논문의 종합검토 역할을 맡은 1인의 부편집인 외에는 심사자 개인별 심사결과를 편집팀 회의에서조차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넷째, 앞의 제언들이 실효성을 갖고 학술지 발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고도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1년 주기의 편집위원회 구성 방식 대신 EAQ와 같이 3-6년 지속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양국 학계의 풍토가 다른 만큼 일시 전환이 쉽지는 않겠으나 편집위원회 및 편집 사무국의 활동 주기를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회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학술지 논문 작성 및 심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했으면 한다. 심사논문에 대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방식, 심사자의 윤리 등에 대해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더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심사 위원이라면 예외 없이 자신이 선호하는 방법이나 견해와 초연하게 연구문제 자체에 초점을 둔 심사를 할 수 있는 풍토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시론 |

한 교육행정학자의 생태학적 고민

신현석(본회 기획위원장, 고려대학교 교수)

나이 50을 넘으면서 고민이 생겼다. 적은 나이도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그래도 오십이면 지천명이라고 했다.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할 나이인데 교육행정학자로서 나는 과연 하늘의 뜻을 잘 알고 이제까지 잘 실천해 왔는지 가끔 상념에 잠기곤 한다. 사실 올해 내내 이런 생각이 내 주변을 맴돌면서 하는 일에 집중도 잘 안되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한해를 보낼 수밖에 없으니 이제 고민 그만하고 마음 다잡고 학자로서 새로운 각오와 함께 새 출발하고 싶은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래서 급한 대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을 글로 써보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론은 교육행정학자로서 나의 개인적인 고민과 생각이면서, 혹시나 나와 비슷한 고민을 앞으로 할지도 모를 후배나 학문후속세대들을 위한 교육행정학자의 학문생태계에 대한 조그만 리포트라고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

사실 어찌 보면 나는 이미 대학원 시절부터 교육행정학자로서 내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한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나는 학부시절에 대학보다는 철학, 사회과학, 교육학 책들을 두루 읽고 토론하는 교외 독서 서클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고학년이 되어서는 본격적으로 공부해보려는 생각에 당연히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진로를 결정하였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육행정학 가운데에서도 교육조직론에 관심이 많았다. 당시 스터디 그룹을 통해 공부한 교육조직의 성격에 관한 Griffiths와 Greenfield의 논쟁은 교육행정학에서 철학의 중요성과 함께 교육행정학의 탐구논리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1987년 강원대학에서 열렸던 교육학회의 ‘한국 교육학의 정립을 위한 교육학 각 분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학술대회는 교육행정학을 전공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지향해야 할 목표 지점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때 “우리의 토양에 부합하는 한국적 교육행정학의 정립”을 위하여 조그만 힘을 보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고 결심했다. 그 후로 유학을 떠날 때까지 우리 교육행정학의 근간을 세우려면 한국 철학과 문화를 공부해야 한다는 다소 폐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관련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했던 기억이 난다.

석사학위를 마치고 유학을 가면서 나의 우리 학문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었던 것 같다. 비록 내가 미국의 교육행정학을 공부하러 가지만 그네들의 탐구논리와 방법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논리와 방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우리 학문의 정립을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친구들에게 피력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목표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야 대단했지만 단순하면서도 열린 마음이 부족했던 '냉정 없는 열정'으로 가득 차있었던 시절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미국유학은 내게 우선 새로운 환경에 살아남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형편 때문에 나의 능력과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생존을 위한 적응'이 끝나자 공부에 대한 열정이 더욱 가열되었다. 학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한국에 돌아가면 학자로서 우리 학문의 장에서 나의 목표를 어떻게 실천해나갈 것인지 고민하기도 하였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30대 초반에 바로 온 좋게 지방대학에 교수로 임용이 되어 본격적으로 교육행정학 연구자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때가 1993년이니 현재까지 18년째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무엇을 했나? 한마디로 무엇이든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초창기부터 학회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듣고, 보고, 발표하고 정책연구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학계와 현실에 빨리 적응하고자 무엇이든 열심히 배우고 싶었고 학문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도 싶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2001년에 모교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학문하는 여건이 더 좋아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교수로서의 역량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정부의 대형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하여 학과 교수들과 의기투합하여 나름의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대학원생 학습조직을 구축하여 정례화 된 학술모임과 스터디 그룹이 연중 돌아갈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그리고 원생들이 교육행정학도로서 성장하기 위한 학습과정을 계획하고 설정하여 그들의 커리어 루트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18년 동안 논문도 많이 쓰고, 정책 연구도 많이 했다. 양적으로 차고 넘치게 활동했던 그동안 우리 학계와 현실에 자연스럽게 묻히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나의 학문생활의 목표와 열정이 식었던 적은 없었지만 적어도 현실에 쫓기는 가운데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중 어느덧 나이 50이 되었다. 올해 내내 지나온 세월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졌다. 한국의 교육행정학자로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적당히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계속할 수도 있겠고, 체력의 부담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니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문의 성격상 많은 교육행정학자들이 그래왔듯이 학내 보직 일을 하거나 대외적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기관장이 되어 교육행정의 실제에 나름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나의 길이 있나? 나의 제자들은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할까? 이제 많이 남지 않은 시간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과거에는 나의 학문여정의 목표가 분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너무 외도를 길게 많이 했던 탓인지 아니면 이제 그 목표를 실천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머리가 복잡하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행정학계의 과거와 현실을 생각해 보았다. 먼저 한국 교육행정학계의 학풍을 세대별로 살펴보자. 교육행정학 1세대 학자들은 이 땅에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닦아 놓았다. 그들은 미국의 교육행정학을 일찍이 접하고 연구 내용과 방법을 도입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교육행정학의 내용

을 구성하고 우리의 교육행정 문제를 연구하였다. 1967년에 교육행정연구회를 창립하여 교육행정학의 학적 조건을 갖추게 한 것도 1세대 학자들의 공로이다. 우리 교육행정학계의 2세대 학자들은 대부분 1세대 학자들의 후학·제자들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기존의 교육행정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학습을 받고 외국 혹은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60년대 중후반부터 '70년대 대학에 입학한 세대들이다. 이미 대학교수로 정년을 했거나 현재까지도 우리 학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2세대 학자들은 한국 교육행정학의 내용 분화에 따른 전문성의 심화와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현실 교육행정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80년대 이후 대학에 입학한 이른바 제3세대 학자들은 교육행정학 연구영역의 횡적 확장을 넘어 다양하고 세련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세부 영역별로 연구의 깊이를 더하였다. 이 세대는 국제화 시대에 국내외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활동의 반경과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한편으론 한국 교육행정학의 근본 토대와 성격에 관한 탐구와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

둘째, 교육행정학 연구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교육행정학 연구는 교육행정의 실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이론을 창출해내는 과정이다. 탐구방식은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과 패러다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론과 실제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 제대로 된 연구를 했다면 실제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결론들의 지속적인 축적과 확인을 통해 만들어진 이론은 실제를 정확하게 기술·설명·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을 가장 많이 엿볼 수 있는 것이 교육조직론 분야이다. 학교의 중요 현상을 조작적으로 개념화하여 측정도구를 만들고, 측정된 변수간의 관계를 고급통계에 의해 분석하여 도출한 결론의 현실성이 부족하다. 제대로 된 연구라 할지라도 결론의 활용과 축적을 통해 우리의 학교행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일회성 연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의 교육행정 현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구는 어떠한가?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는 연구의 필요성에서 당위적인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연구의 결론은 수명이 짧다. 어차피 한시적인 용도로 행하는 단기간 연구(studies)라서 연구(research)의 엄격성과 규칙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학자들이 많은 시간을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단순히 문제 진단과 단기적인 해법 모색에 그치지 말고 이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회를 정책연구(policy research)를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셋째, 교육행정학의 내용 관점에서 살펴보자. 그동안 우리 교육행정학의 탐구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분화해 왔다. 그런데 영역이 넓혀진데 비해 각 지류 영역의 학문적 토대와 연구자의 활동성이 빈약하다. 이러한 경향은 지류 영역중심으로 학자들이 활동하는 가운데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중심 잡기와 토대를 약하게 하고, 얽은 연구자 층으로 인해 지류 학문의 전문성 약화와 편중 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교육행정학의 하위 분야가 그 만큼 많아졌다는 것이 곧 연구의 전문화를 심화시킨다는 가설은 피상적이고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학의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것은

교육행정학회의 전체 회원 수에 비해 지나치게 교육정책과 교육조직 분야에 연구자와 연구물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 두 분야가 교육행정학의 핵심 학문분야였고 교육행정학 교육이 이 두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탓도 있지만, 분야의 편중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가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토대와 근간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행정학의 방법 측면에서 살펴보자. 교육행정학의 내용 탐구기제로서 연구방법은 철학이 결부된 연구 패러다임의 실천적 도구이다. 흔히, 문헌, 양적, 질적연구방법으로 분류되고 이를 혼합한 연구 방법들로 나누어지곤 한다. 현재 우리 교육행정학 연구는 과거 문헌연구 중심에서 양적연구의 괄목할만한 증가 그리고 질적연구의 꾸준한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연구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각 연구방법 내에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행정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론적 진보는 가장 눈에 띄는 우리 교육행정학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연구방법 곳곳에 숨어있는 신화는 여전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양적연구의 경우 행동과학의 원리와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방법을 쓰는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와 맹목적인 고급통계지향으로 인한 통계방법의 오용과 남용 그리고 결론과 실제의 괴리는 깊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질적연구도 연구의 인식론적 배경과 연구설계의 정교함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헌연구는 체계적인 분석 틀 혹은 말 그대로 심오한 고찰 없이 문제중심적 기술이나 요약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다. 연구방법적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의식은 대부분 모집단 설정이 불분명하여 모수의 설명 범위가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 결론의 일반화 과정(실제에의 적용 혹은 시사점 도출)이 분명하지 않고, 외적 타당도(연구결과와 실제에의 부합정도)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교육행정학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교육행정학자들은 어떻게 성장해서 활동을 하고 정년을 맞이했는지 생태학적 관점에서 회상해 보았다. 보다 심오한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하여 전문적인 교육행정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학부교육을 통해 다져온 기초적 지식과 대학원 수업 그리고 동료들과의 스터디 여기에 개인적인 학구적인 노력이 결집어져 공부의 깊이가 더해진다. 개인에 따라서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목적이야 다양하겠지만 외국 유학을 통해 교육행정학을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하려는 사람도 있다. 어떤 경우든 지도교수의 영향은 막중하다. 공부의 방향은 물론 논문의 주제에 이르기까지 지도교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책연구를 많이 하는 지도교수의 영향을 받아 교육행정학 연구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강의만 열심히 하는 지도교수에 의해 연구보다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혹은 연구소에 직장을 얻고자 할 때 실력은 기본이고 지도교수와 동문들의 성원 속에 교수·연구자가 되고 학자로서의 생활이 시작된다.

3·40대에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학회에 발표도 하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친다. 때로는 정책연구를 통해 사람들과 교분도 쌓고 누가 능력자인지 분간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전공이 교육행정 혹은 정책이

다 보니 외부로부터 부탁도 많고 현실 참여를 제외받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정책연구를 포함해 외부활동이 많아지면서 연구시간이 부족해 생산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소홀해지기도 한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어느덧 기관 내에서 보직을 할 나이가 되기도 했고, 선거철에 자문 요청이 들어오기도 한다. 교내든 교외든 정치가 작동하는 영역에서 운신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기회를 잡아 다른 세계를 접하는 것도 교육행정학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그다지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 어차피 많이들 그렇게 하고 전공이 교육행정학이니까. 그렇게 세월이 가 50대 중반에 접어들면 교육행정학자들의 트랙은 연구트랙, 교육트랙, 보직트랙, 외부트랙으로 나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교육행정학자들의 분포 상으로 볼 때 연구트랙이 적다는 것이다. 하루 종일 연구실을 지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후학들에게 학문탐구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기실천적인 연구자들이 적다는 아쉬움 말이다. 그렇다고 연구트랙 외의 트랙으로 방향을 정한 학자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행정학 교육은 연구 이상으로 중요하며, 학내 보직은 우리 교육행정학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며, 외부트랙은 교육관련 기관장 혹은 참모로서 교육행정학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내 짧은 소견으로는 적어도 4분의 1이상은 연구트랙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학문발전을 위해 바람직해 보인다. “나는 어디로 가야하나?” 이것이 나의 고민이다.

여기서 나의 고민은 우리 학자들의 생태적인 경로로부터 발생했으며 연령으로 볼 때 생길만한 시점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는 나 혼자만의 ‘살길 찾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잘 안다. 나를 바라보는 나의 학생들과 나의 길에 영향을 준 스승의 바람 그리고 나의 연구여정을 아는 선후배들의 기대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꼭 이런 기대에 대한 부담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학문의 실제적 정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한 연구내용과 적절한 방법론의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학문을 시작했던 제3세대 초반의 학자로서 나의 목표가 그냥 구두선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천을 위한 조그만 움직임을 시작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것이 공부를 업으로 삼는 인생 여정의 가을 속에 있는 내가 날로 깊어가는 가을 절기에 나의 생태적 위치를 방향 짓는 소박한 생각이 아닐까?



| 시론 |

대학발전기금의 법적 발전 방향

최준렬(본회 부회장선출위원회 부위원장, 공주대학교 교수)

1. 서언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이다. 학교의 부족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필요한 교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부모, 동문, 기업,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물품 등을 기부 받아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으로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금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발전기금이 가지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많은 잡음이 발생한다. 사립초등학교 입학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을 1,000만원으로 내도록 하는 학교가 있어 말썽이 되고 있으며, 유치원 입학에도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학교가 적발되고 있다. 학교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문제는 대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경우 학교발전기금은 모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는 조성된 발전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다. 조성된 발전기금을 임의대로 사용하여 발전기금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대학의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문제는 초·중등학교보다 더 심각하다 할 것이다. 초·중학교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을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의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법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규제는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문제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다.

2. 초·중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규정

학교발전기금은 자발적 협찬금이다. 그러기 때문에 강제로 모금할 수 없으며, 일정액을 배당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발전기금을 모금하면서 사전에 약정을 하거나 일정액을 배당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나, 모금된 재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제33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학교

장이 학교발전기금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주체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전에 학교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기본운영비에 충당해서는 안 되며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학교발전기금의 접수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은 기부금품과 모금금품으로 구성되며 기부금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으나, 모금금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심의·의결된 후에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되는 금품 중에서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차량, 건물이나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또는 교직원의 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넷째,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은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에 한해 집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 이들 사업에 한정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발전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발전기금 이외의 사업에 재원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면서 하지 않아야 할 사항으로 ① 반대급부가 있는 금품의 접수, ②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③ 모금액의 최저액을 정하는 행위, ④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을 받는 행위, ⑤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⑥ 발전기금의 안내문을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⑦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⑧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⑨ 기타서, 납부서에 납부자 이외의 자녀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는 행위, ⑩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 학생의 경우 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기에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학교발전기금 때문에 학생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3. 대학의 학교발전기금 규정

대학 역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집행하기 위해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다. 대학은 학교발전기금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의 설립과 운영은 학교별로 하도록 하고 있다. 재단에

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규정은 총칙, 재산과 회계, 임원,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규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기금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 연구, 장학분야의 지원을 위해 발전기금을 사용하도록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둘째, 발전기금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된 사업은 대학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공통적으로 규정한 사업 내용을 보면 ① 교직원의 교육,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② 도서, 교육, 연구기자재 및 시설 확충, ③ 국내, 외 학술활동 지원, ④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⑤ 대학문화 활동 지원, ⑥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셋째, 발전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많은 규정을 할당하고 있다. 모금된 재산과 회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들 관리를 담당할 이사회와 임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많은 조항을 할애하고 있다.

4. 대학 학교발전기금의 법적 발전 방향

대학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발전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의 수업료, 정부의 지원비 등으로 실행할 수 없는 각종 사업을 가능하게 하며, 학교를 변화시키고,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이런 기능 때문에 대학별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분위기도 점차 기부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기부문화가 열악한 우리나라의 여건을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발전기금이 학교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때 기부문화는 더 촉진되고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발전되면 우리 대학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 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 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 법적으로 구비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항이야 대학의 자율로 정하지만 전국의 대학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과 같이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발전기금에 관한 조항을 넣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규칙 등이 제정되어 발전기금의 조성, 운영의 원칙 등이 정해져야 한다. 이런 원칙이 정해져야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부당하게 운영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초·중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과 같이 구체적으로 모든 사항을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원칙, 사업내용 등은 규정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된다면 전국의 대학이 학교발전기금으로 달성해야 할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이 편협되게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본지에 게재된 논단의 내용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학회 활동 안내

1. 학술대회

● 제 4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개최 완료

일 시 : 2010년 10월 15일(금) 9:00 - 18:00

장 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주 제 :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 연구 데이터

주 최 :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공동 주최

● 제158차 학술대회 개최 완료

일 시 : 2010년 10월 30일(토) 13:30 - 18:00

장 소 : 한양대학교(서울)(한국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와 연계)

주 제 : 자유주제(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발표)

● 제38차 연차대회 및 159차 학술대회 개최 예정

일 시 : 2009년 12월 10일(금) 13:00 - 18:00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컨벤션홀

주 제 :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기획

2. 제 4차 예비 연구자 학술 포럼 개최 완료

● 제 4차 예비 연구자 학술 포럼 개최 완료

일 시 : 2010년 8월 20일(금) 13:30 - 17:30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103호

주 제 : 자유주제

3. 세미나와 토론회 개최 완료

● 학술세미나 개최 완료

일 시 : 2010년 8월 19일(목) 13:00 - 17:30

장 소 :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주 제 : 지방교육행정체제 선진화 방안

●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완료**

일 시 : 2010년 10월 15일(금) 13:00 - 18:00

장 소 : 창원 컨벤션센터(CECO)

주 제 : 자율통합시 자치권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분권

주 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창원시

주 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대한교육법학회

●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과제 토론회**

일 시 : 2010년 10월 19일(화) 15:3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주 제 :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과제

주 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과 공동 주최

4. 각종 회의 사항

● **학술위원회 회의**

일 시 : 2010년 10월 1일(금) 18:00

장 소 : 남촌 한정식(서울교대)

안 건 : 연차학술위원회 일정 논의

● **부회장선출위원회 1차 회의**

일 시 : 2010년 10월 6일(수) 낮 12:00 ~14:00

장 소 : 어부사(서울교대)

안 건 : 39대 부회장 선거 일정 확정

● **부회장선출위원회 2차 회의**

일 시 : 2010년 10월 15일(금) 17:00 ~19:00

장 소 : 장원한정식(서울교대)

안 건 : 39대 부회장 후보 확정 및 향후 선거 일정 논의

● **소석논문상 위원회 회의**

일 시 : 2010년 10월 25일(월) 12:00

장 소 : 남촌 한정식(서울교대)

안 건 : 향후 심사 및 수여 일정 논의

● **이사회**

일 시 : 2010년 10월 30일(토) 11:30 - 12:50

장 소 : 한양대

안 건 : 2011년 한·일 교육행정학회 주최 국제학술세미나(2011.2.9~11) 등

5. 부회장 선거 일정

● **부회장 후보(가나다순)**

· 이일용(중앙대학교 교수)

· 허병기(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선거일정**

· 투표용지 배송: 10월 25일(월) - 11월 4일(목)

· 투표 기간: 11월 5일(금) - 11월 12일(금) (8일간)

· 개 표 일: 11월 19일(금)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 · 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28권 (2010년)	1호	2월 29일
	2호	5월 31일
	3호	8월 31일
	4호	10월 31일

● **원고분량 : ① A4용지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② 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

③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25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심사료 : 90,000원(심사위원 3인×3만원)**

● 게재료

- ① 입금시기 : 심사결과 '게재가' 로 결정된 후에 입금
 - ② 게재료 :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4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 ③ 입금계좌 : 079801-04-057012(국민은행), 예금주 : 송광용(논문)
- 원고 작성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양식(홈페이지→논문접수→접수안내→양식다운받기)을 다운 받은 후, 원고 작성 세칙 준수 요망(학회 홈페이지 참조)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

● 신규회원(2010. 8. 1 - 2010. 10.31)

- 개인회원 : 구교정, 권순성, 권영인, 김경주, 김만겸, 김미영, 김수현, 김숙현, 김애선, 박상영, 박세훈, 박영주, 박정희, 박진은, 박현주, 배은주, 변광화, 손병철, 신재욱, 신재철, 신현정, 유광호, 윤소희, 이상희, 이종미, 이태우, 정수현, 정하보, 조용상, 최영표, 최홍섭 (이상 31명)

● 연회비 납입현황(2010. 8. 1 - 2010. 10.31)

- 개인회원 : 김민조, 김태호, 노중희, 류명혜, 박균달, 박순옥, 박철웅, 백혜선, 성삼제, 손중호, 신동한, 심학경, 오세희, 오혜정, 윤희경, 이윤식, 이제봉, 정우영, 최만덕, 황연성 (이상 20명)
- 기관회원 : 과천도서관, 평택대학교 (이상 2곳)

- ※ 정보가 잘못 표기되거나 누락된 경우 사무국(총무간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연회비 납부 관련 문의는 사무국(총무간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부

- 정태범(한국교원대학교, 본회 소석논문상위원장) 회원 소석논문상 기금: 1,000만원
- 임연기(공주대학교, 본회 부회장) 회원 학회 기부금: 300만원
- 김도기(한국교원대), 김병찬(경희대), 전제상(경주대), 홍창남(부산대) 회원 학회기부금: 500만원

- ※ 학회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소식

◎ 제158차 학술대회 한양대학교에서 성료 교수, 대학원생, 연구자, 교육행정가 등 150여명 참여 박사논문발표자에게 기념패 수여 전임 회장단에게 공로패 수여

한국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와 연계되어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한국교육행정학회 제158차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지난 10월 30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1세션(초·중등교육)과 2세션(고등교육)으로 나뉘어 전국 각 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과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 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및 교육행정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송기창 교수(숙명여대)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총 5명이 발표를 하였다. 우선 양승실 박사(한국교육개발원)가 '학교지원 전문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실태 및 요구분석'을, 김효선 박사(서울대)가 '마이스티고 진학 학생의 특성연구'를, 신현정 박사(경북대)가 '교원 인사관리제도의 진단: 경력정체의 관점에서'를, 정성수 교수(인제대)가 '정책담당자의 이동이 교육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장경원 교수(경기대)가 '학교컨설팅 방법으로서의 액션러닝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2세션에서는 김남순 교수(조선대)의 사회로 총 6명이 발표를 하였다. 주휘정 박사(고려대)가 '신규 대출자 임금에 대한 개인 및 대학 효과 분석'을, 이정열 박사(서울대)가 '제1단계 두뇌한국21(Brain Korea 21) 사업 효율성 분석'을, 이삼경 박사(충남대)가 '성인여성학습자의 고등교육 진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 분석 연구'를, 최영표 교수(동신대)가 '중국 고등교육의 시장화 추세와 실상 연구'를, 변기용 교수(고려대)가 '국립대학 가버넌스의 역사적 변천과정 분석'을, 마지막으로 변수연 박사(고려대)가 '주인-대리인 이론을 통한 대학입학사정관계 지원 사업 분석'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 토론자로는 조영하 교수(경희대), 김희규 교수(신라대), 홍창남 교수(부산대), 박경호 교수(경운대), 손경애 교수(서원대), 고장완 교수(성균관대)가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이끌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주휘정 박사, 이정열 박사, 이삼경 박사에게 학회의 연구 분위기 진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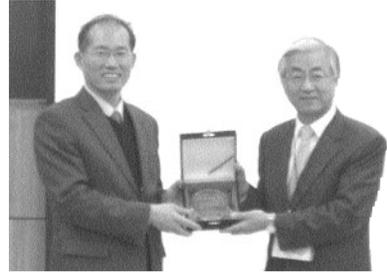
장경원 교수(발표자), 송기창 교수(사회자), 홍창남 교수(토론자)
(좌측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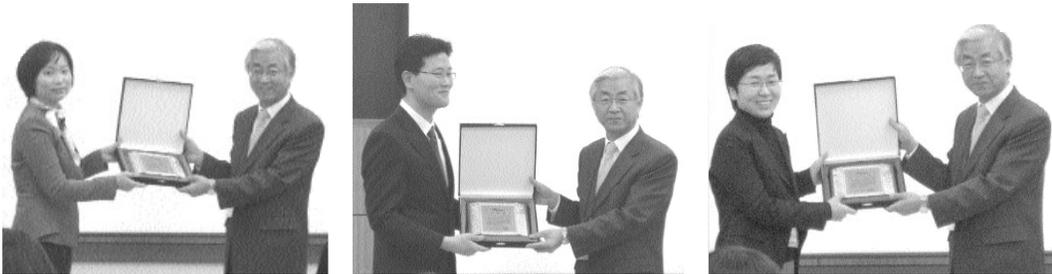
양승실 박사(발표자), 김효선 박사(발표자), 조영하 교수(토론자)
(좌측부터)



전임 회장단 공로패 수여받는 신재철 전임회장. 패를 수여하는 송광용 회장, 정수현 사무국장 (좌측부터)



전임 회장단 공로패 수여받는 염민호 전임 사무국장 (좌측)



박사기념패를 수여받는 주희정 박사, 이정열 박사, 이상경 박사 (좌측부터)

에 기여한 공을 기념하여 학회가 제작한 기념패를 수여하였다. 그리고, 전임 회장단인 신재철 회장(전남대 교수), 염민호 사무국장(전남대 교수), 김소영 간사(전남대 박사과정)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 제 4차 예비 연구자 학술 포럼 종료

8월 20일(금) 13:30부터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제 4차 예비 연구자 학술 포럼을 개최하였다. 박수정 교수(충남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포럼에서는 류민영 박사과정생(경북대)가 '정책네트워크와 갈등관리가 정책추진과정에 미치는 영향:교원능력개발평가를 중심으로'를, 신철균 박사과정생(서울대)이 '연구학교 제도의 실행 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에 장덕호 교수(상명대)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어서 심연식 박사과정생(연세대)이 '학벌 지향적 재수현상의 교육학적 분석'을, 이진철 박사과정생(공주대)이 '농촌 소규모 S중학교 컨설팅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차성현 박사(한국교육개발원)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박수정 교수(충남대), 류민영(경북대), 신철균(서울대), 장덕호 교수(상명대) (좌측부터)



심연식(연세대), 이진철(공주대), 차성현 박사(KEDI) (좌측부터)

●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기획’ 주제로 제 38차 연차학술대회 개최 예정
12월 10일(금) 13:00~18:00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컨벤션홀

오는 12월 10일(금)에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기획’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영철 교수(한국교육정책연구원 원장)가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기획’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기획, 지방교육행정의 교육기획, 단위학교의 교육기획, 대학의 교육기획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일시	발표 및 내용	사회	
13:00~13:20	접수		
제 1부	13:20~13:30 개회식 개회사 송광용(본회 회장, 서울교대 총장)	정수현 (본회 사무국장, 서울교대 교수)	
	13:30~14:00 기조발표 주제 :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기획 발표자 : 김영철(한국교육정책연구원 원장)	사회자 : 김광호 (교육과학기술부 부이사관)	
	14:00~14:30 주제발표1 : 국가 수준의 교육기획 발표자 :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론자 : 조동섭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4:30~15:00 주제발표2 : 지방교육행정의 교육기획 발표자 : 김재웅 (서강대학교 교수) 토론자 : 박수정 (충남대학교 교수)		
휴식	15:00~15:20 휴 식		
제2부	15:20~15:50 주제발표3 : 단위학교의 교육기획 발표자 : 박제운 (영등포고등학교 교장) 토론자 : 양성관 (전국대학교 교수)	사회자 : 김혜숙 (연세대 교수)	
	15:50~16:20 주제발표4 : 대학의 교육기획 발표자 : 이차영 (한서대학교 교수) 토론자 :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수)		
	16:20~17:30	종합토론 및 폐회	
	17:30~18:00	총 회	

■ 학회 회원가입 활동 협조

- * 교육행정학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입 대상 : 교육행정 관련 석사·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초·중등학교의 교원,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 담당자,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 등

* 회원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년 간 4권
- 뉴스레터 년 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회비납부
(가입 회원께서는 회비납부 후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이후에 학회 메일 (kssea1@hanmail.net)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께서서는 학회 홈페이지 (www.kssea.or.kr)에 접속하셔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메일 수신에 관한 안내

- * 대학/기관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회원님께 학회의 단체 안내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기관 등은 단체메일을 수신 거부하더라도 개인에게 스팸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습니다. 각 포털사이트에서 단체메일 수신이 가능 하오니,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 (kssea1@hanmail.net)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비 납부 안내

- *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회비 납부 현황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연회비 안내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회비납부: 079801-04-056987(국민은행), 예금주 : 송광용(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우면로 161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414호
- E-Mail : kssea1@hanmail.net □ 전화번호 : (02) 3475-2522
- 회 장 : 송광용(010-8974-9430, 02-3475-2200)
- 부회장 : 임연기(011-9870-2053)
- 사무국 : 정수현 사무국장(016-226-6356)
 신철균 총무간사(017-201-3998)
 김효진 편집간사(010-5120-0814)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8.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

